“적폐세력 농간 참는 데도 한계” 5·18 민심 끓어오른다

“특별법 무관심한 한국당, 광주 짓밟는 태도” 강경 대응 천명
5월단체·시민모임 “황교안, 기념식 참석 등 용납 못해” 경고

5·18 망언 등 일부 세력의 도발에도 ‘성숙한 대처’를 강조하던 5·18 민심이 강경하게 돌아섰다.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이 이를 지연·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주에 방문한 지난 3일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모인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며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이들의 분위기가 강경하게 돌아선 것은 광주에서 특별한 날로 꼽히는 5·18 기념일에 금남로와 5·18민주묘지, 전남대 후문 등에서 강경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강경 대응에 힘이 실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선 황 대표의 광주 방문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온 불만과 분노가 반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 대표가 광주를 찾아왔다는 것은 ‘광주 민심을 짓밟는 태도’라고 단체 대표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 황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 하는 것은 낯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에 이어 광주운동본부는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을 욕보이는 적폐세력의 광주 금남로와 5·18민주묘지 앞 집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운동본부는 “한국당은 솜방망이 징계로 5·18 망언 의원을 퇴출하라는 국민 요구를 저버렸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도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한 한국당은 오월 영령을 기만하고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 4당 의원 166명이 함께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항쟁 39주년 전까지 제정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한국당의 법치 농단도, 몰지각한 적폐세력의 농간과 조롱도 참고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한국당과 황 대표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태도 변화와 협조를 보여라”며 “그렇지 않다면 39주년 기념식 참석이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항쟁 39주년 당일 광주에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집회를 예고한 일부 단체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3일 광주송정역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문재인 STOP 광주·전남 시도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 왔다가 물세례를 당하는 등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최환준 기자

6일 오전 기아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노사상생 효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 나태율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 이 시장,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 /광주시 제공

“기아차 노조 광주형일자리 협조해달라”

李시장, 기아차 ‘효 한마당 큰잔치’ 참석…노사상생도시 구축 강조

광주시가 기아차 노조에 광주형 일자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6일 오전 기아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아차 노사상생 효 한마당 큰잔치에서 민주노총 소속인 기아차 노조와 가족 등 1천여명 앞에서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광주는 정의로운 도시지만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 많이 낙후돼 있으며 실제 일자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다”면서 “2017년만 해도 8천100명이 광주를 떠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중 66%가 우리의 젊은이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지난 1월14일 대한민국 최초로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노사상생도시는 근로자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와 기업가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이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지금있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선제적 대책과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평화도시 노사상생도시의 첫 걸음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면서 “이는 현재의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있는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로 광주에 1만2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대한민국에서 사업 못하겠다고 떠나려 했던 투자가들, 떠났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운명은 광주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장을 믿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장마철 대비 하천 36곳 관리상황 점검

시설물 유지상태·위험요소 제거

광주시는 여름 장마를 대비해 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하천 36곳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하천 관리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3곳의 국가하천(영산강, 황룡강, 지석천)과 33곳의 지방하천 등 201.19㎞ 구간으로, 자치구 자체점검과 광주시의 표본점검이 함께 실시된다.

점검은 우기대비 하천주변 공사현장과 제방 호안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상태, 유소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장애물을 현장 점검해 하천기능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하천구역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경작, 물건적치, 불법 형질변경 등 하천 불법 점용 상황도 함께 살펴본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천시설물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여름철 장마철 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하천구역 안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상황 고지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우기를 앞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할 계획이다”며 “하천을 불법 점용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바른미래 광주시당, 오늘 5·18민주묘지 참배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7일 오전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산갑) 광주시당 위원장, 박주선 국회의원(동남을), 권은희 국회의원(광산을)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역사는 망각과의 투쟁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5·18역사와 오월정신을 오롯이 기억하고 면면히 계승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오욕의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불의와 독재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했던 정의로운 광주시민들의 역사와 교훈을 후세대에 널리 전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로 날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전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대상자 376명 모집

오는 24일까지…18-34세 미취업자 선발 6개월 지원

전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총 830명 3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20억원이 반영돼 지난달 1차 454명을 선정했다. 1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번에 376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다.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nam.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최종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차 정량평가 80%(가구소득 40%, 미취업 기간 40%, 거주기간(가점 10점))와 2차 정성평가 20%(구직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